

작성: 김창배 수석연구위원 (kim.chang.bae@ydi.or.kr)

1. 현황: 한국의 상대 빈곤율 OECD 4위

○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빈부격차 및 부의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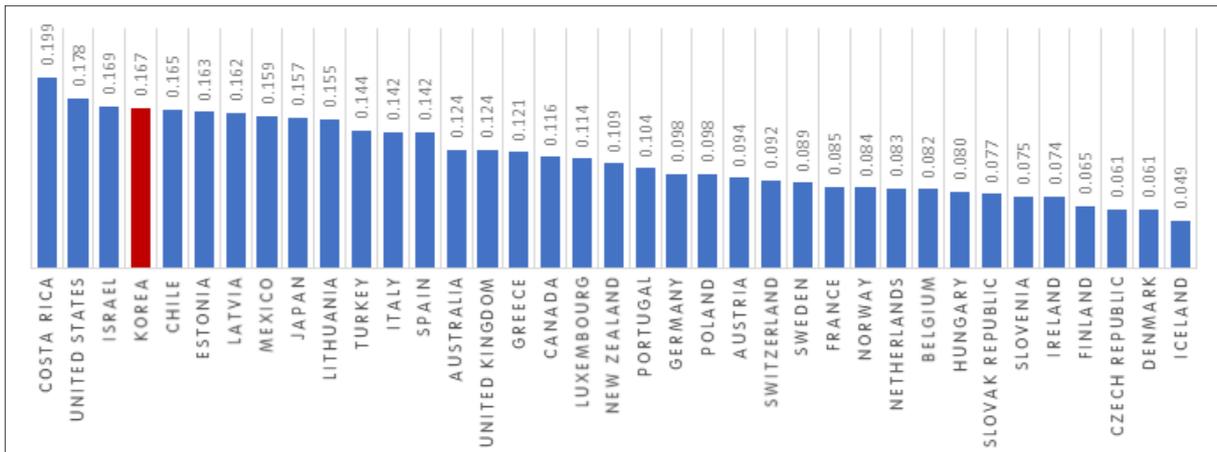
- 2018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.7%로 37개 회원국 중 4위를 차지

- OECD 평균(11.5%)보다 5.26%p나 높은 수준
-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(19.9%·1위), 미국(17.8%·2위), 이스라엘(16.9%·3위)뿐

※ 상대적 빈곤율이란 전체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%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

[그림 1]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(2018년, after taxes and transfers)

단위: 비중 %



자료: OECD, Income Distribution Database

주: 뉴질랜드는 2014년, 네덜란드는 2016년, 헝가리, 덴마크, 칠레, 아이슬란드, 스위스는 2017년, 라트비아·영국·코스타리카·캐나다 2019년 기준임

- 문제는 이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바로 ‘부익부 빈익빈’, ‘승자독식’, ‘부의 대물림’ 등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는 점
- 이에 본고는 우선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데 대한 원인부터 냉철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

2. 원인

① 심각한 노인빈곤이 주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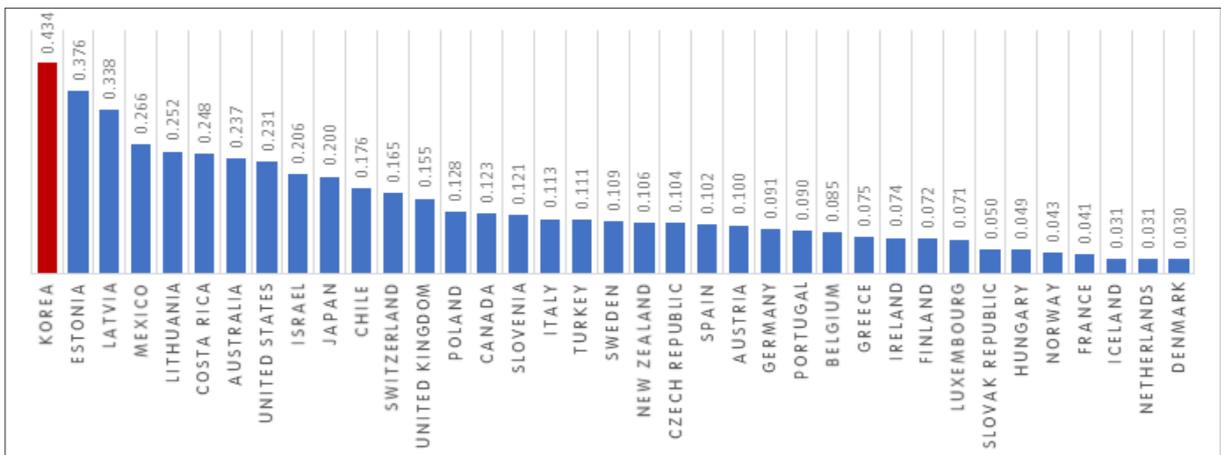
○ 65세 이상 빈곤율은 43.4%(2018년 기준), OECD 평균(14.1%)의 약 3배로 OECD 국가 중 1위

- 반면, 생산가능인구(18~65세)의 빈곤율은 11.8%로 OECD평균(10.3%)과 유사하며 OECD 국가 순위는 13위

○ 결국 압도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이 전체의 빈곤율 수치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

[그림 2] 고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(2018년, after taxes and transfers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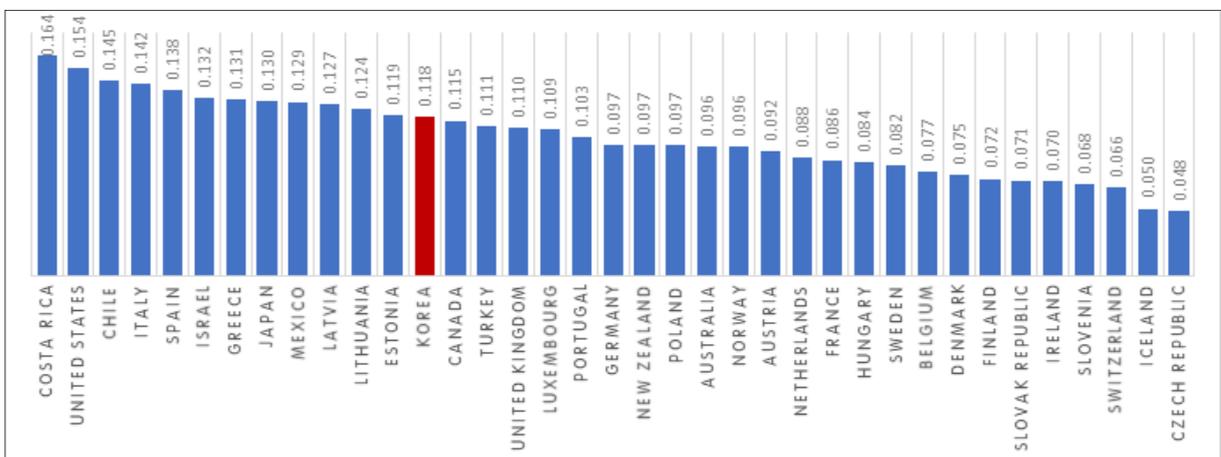
단위: 비중 %



자료: OECD, Income Distribution Database

[그림 3]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빈곤율(2018년, after taxes and transfers)

단위: 비중 %



자료: OECD, Income Distribution Databas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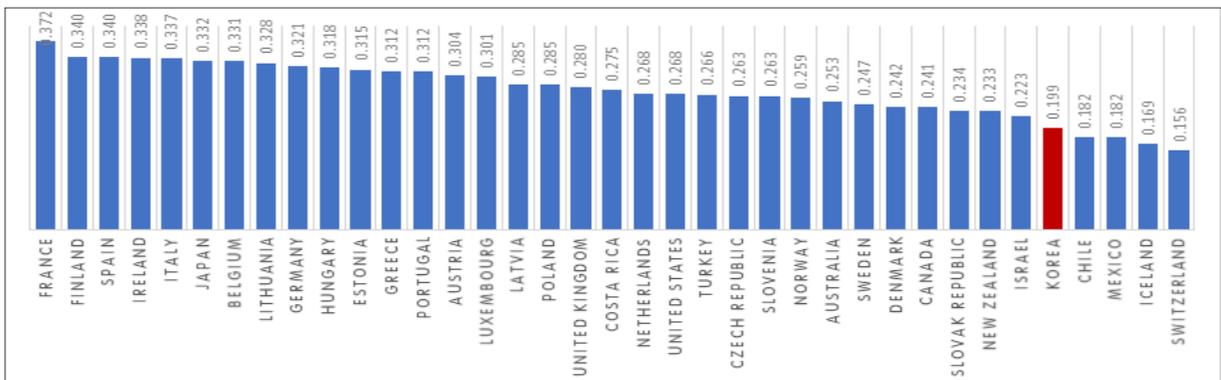
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

○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 소득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

- 사실 세금과 이지지출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오히려 매우 양호
- 이 경우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9.9%로 37개국 중 33위이며 OECD 평균(27.5%)에 비해 7.6%포인트 낮은 수준

[그림 4] 전체인구의 상대적 빈곤율(2018년, before taxes and transfers)

단위: 비중 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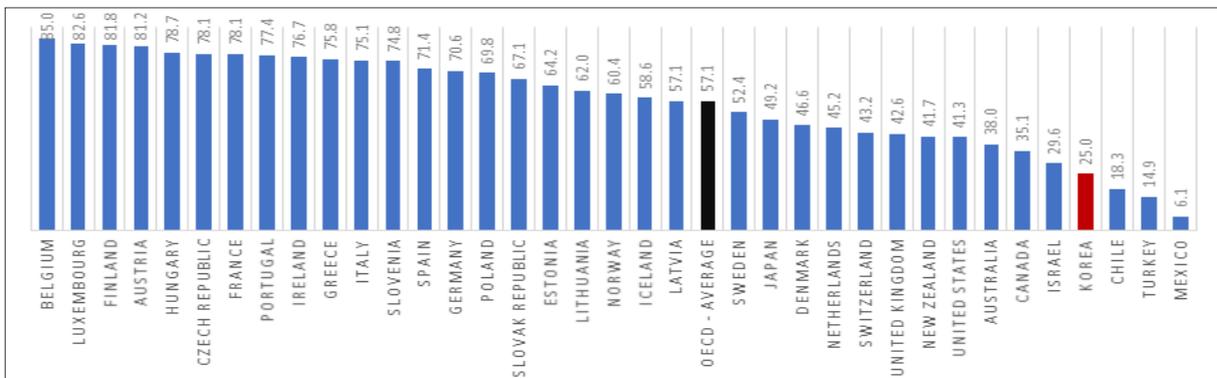


자료: OECD, Income Distribution Database

- 하지만 고령층 소득중에 연금 등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5%로 OECD 평균(57.1%)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 노인 빈곤율의 요인

[그림 5] OECD, 고령층 소득중 공적이전소득 비중 (2016년)

단위: %



자료: OECD, Pensions at a Glance

-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의 수급자와 금액이 늘어나면서 노인빈곤율도 점차 하향
 - 2020년 국민연금 1인당 수급금액은 월평균 93만원으로 2021년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%인 91만4천원을 상회하는 상황
 - 한국의 노인빈곤율 하향: 45.0%(2016년), 44.0%(2016년), 43.4%(2018년)

3. 시사점 및 정책과제

□ 시사점

- 첫째, 복지시스템 미진한 가운데 고령화 급진전에 따른 노인 빈곤이 주원인
 -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노인빈곤 대책에 집중하지 않으면 소득 재분배 악화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
- 둘째,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가구 소득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
 - 단, 점차 국민연금, 기초연금 수혜자 늘면서 노인 빈곤율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
- 셋째, 설부른 부자증세, 무조건 복지확대를 외치는 건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님

□ 정책과제

-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‘1인 1연금 체계’ 로 전환
 - 국민연금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가 국민연금을 모두 수급가능한 반면, 홀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자 1인만 연금을 수급
 - 홀벌이 가구의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하고, 단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, 배우자의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
- 기초연금 지급산식과 대상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
 - 전체 노인의 70%에게 월 3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현재의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는 더 높은 연금을 지급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에게는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

- 현행 30만원의 기초연금 급여 수준도 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 검토

○ 최저임금 연령별 차등제 도입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

- 단기·알바 일자리로 '통계 분식', '생색내기'에 불과한 문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은 '밑 빠진 독에 물 붓기'로 지속 가능성이 거의 없음
- 선심성 복지·경제 정책보다는 현실성 있는 일자리 확충이 빈곤 문제의 근본 해법
 - 차등임금제를 통해 시장에서 연령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노인 일자리와 소득증대가 가능